

尹대통령·여권 일부, 폭동 두둔 '망언' 이어가

尹 "폭력 안된다"면서도 극렬지지층에 메시지 보내 김재원 "성전에 참여한 아스팔트 십자군들에 경의" 박찬대 "폭동 가담자, 배후·선동세력 발본색원해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도전받고 있는 가운데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일부 여당 관계자들이 여전히 폭동을 두둔하는 듯한 망언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달 12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낸 네 번째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고, 이날 1일 한남동 관저앞에 모인 집회자들에게도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체포되면서 공개한 영상 메시지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육필 원고에서도 "계엄은 범죄가 아닌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임을 주장해 극렬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 정치를 이어갔다.

그는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일부 시위대를 향해서는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면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 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강성 지지층을 향해 폭력 사태는 안된다고 얘기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여전히 위법·불법적 계엄의 정당성만 주장하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의롭고도 힘든 성전(聖戰)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고 적었다.

그는 "그 성전의 상대방은 당연 '반국가세력'의 괴수(魁首) 이재명"이라며 "거병한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십자군으로 칭송하고, 사법 시스템을 폭력으로 침탈하면서 그 상대방은 '반국가세력'의 괴수 이재명'이란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다.



서부지법 외벽 복구 작업 2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로 파손된 서울서부지법 청사에서 관계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의원도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대 일부가 법원 담을 넘다가 체포되자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

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이번 사태를 오히

려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관은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뿐 아니라 폭력을 교사·선동한 자 모두 찾아내 엄정히 처벌하라"며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린 중대범죄인 1·19 법원 폭동의 가담자뿐 아니라 배후·선동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도 1·19 법원 폭동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부정하고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권성동 원내대표, 윤상현·김민진·김기현·나경원 의원은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며 "윤석열을 계속 옹호하며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하는 언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여 테러와 폭력을 조장했고 서부지법에 무단 침입한 자들을 옹호했다"며 "불법 폭력을 선동한 전광훈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극우 유투버들과 일심동체 돼 지지자들을 선동한 것이 폭동을 부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수기자

법원행정처장·법무대행 "사법훼손"...내란 여부엔 "검토 필요"

국회 법사위 답변...서부지법 폭력난입에 행정처장 "참담·분노" 법무장관대행 "법치·사법체계 근간 훼손 중대사안...철저 수사"

천대업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0일 국회에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로 인해 사법기능이 훼손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폭력 점거 행위 가담자들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각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거나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의견을 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서부지법 난입 폭동으로 사법 기능 훼손이 발생한 게 맞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험한 야기했다 아니면 실제로 재판 업무의 기능에 훼손을 가했다"라는 질문에는 "위험은 당연히 발생했고 오늘 재판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복원에 굉장한 큰 노력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헌법기관인 법원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 아니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는 "그런 의미에서 참담하고 분노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그런 상황이면 재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다만 "폭동이 맞느냐"는 정위원장의 질의에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배형원 행정처 차장은 '이들은 폭동이다. 맞느냐'는 민주당 서영교 의

원의 말에 "맞다"라고 대답했다.

천 처장은 난입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느냐는 정 위원장의 앞선 질의에는 "강압으로 불만을 표출한 폭력"이고 사법부의 권능 행사를 막으려는 목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가할 여지도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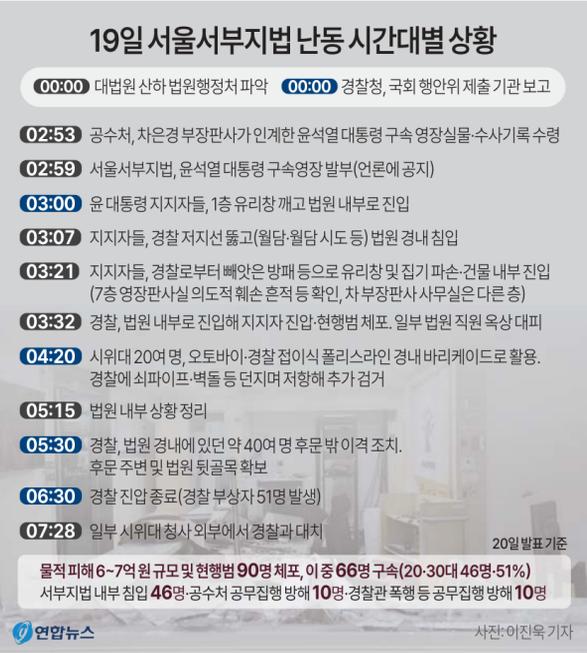
다만 "수사기관에서 엄밀하게 수사해서 저희가 판단해야 할 심판 기관에 있기 때문에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시위대가 법원 폐쇄회로(CC) TV를 파손하는 등 계획적·지능적으로 사법 기능을 훼손한 정황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수사를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를 '폭동'이라 할 수 있느냐는 정 위원장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대검에서는 불법 폭력 점거시위 이렇게 (본다)"라고 답했다.

김 대행은 또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원인이 어찌 됐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에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수사기관에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사법기능 훼손 여부를 묻는 박 의원 질의에는 "네. 일부 훼손됐다"고 답했다. 내란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지휘 통솔 체계가 있었다면 내란죄가 되는 것이 맞느냐'는 박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국헌문란 목적과 지휘 통솔 책임이 입증된다면 전제 하에서는 성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서부지법 사태' 66명 구속영장

유투버도 3명...총 90명 현행범 체포 절반 이상 20·30대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서부지법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장이 신청된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원 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원 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은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지만, 20·30대가 51%(56%)로 과반이었다고 밝혔다.

또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 중 유투버도 3명 포함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투버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영록 지사 "서부지법 폭동 일벌백계" 촉구

"尹내란 추종 세력들까지 준엄한 법 심판대 세워야"

김영록 전남지사가 서울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와 내란 추종 세력에 대한 일벌백계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뒤흔든 폭력 난동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제목의 글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김 지사는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서부지법 습격 폭력 사태에 온 국민이 경악했다"며 "해방정국 혼란기를 맞은 듯한 일부 폭도들의 무법천지가 2025년에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다시는 이런 무법천지가 재연돼선 안 된다"며 "폭력 난동사태

에 직접 가담한 자들은 물론, 부정선거 가짜뉴스로 사회 혼란을 선동하고 윤석열 내란행위를 국민 저항권 해운운하며 추종하는 세력들까지 준엄한 법의 심판대에 세워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격이 떨어지고 대외 신인도가 주저앉았다"며 "여기에 법치주의까지 뒤흔든 서부지법 난동으로 또 얼마나 국격과 대외 신인도에 큰 충격을 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재정기자

대법관회의 "법원 공격은 법치주의 부정...중대 범죄"

이례적 입장 표명·강경 어조... "사법부 역할 믿고 판단 존중해달라"

대법관들은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단 침입·파괴·협박 행위에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우려를 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20일 오전 열린 회의에서 천대업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현직 대법관 12명 전원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관해 논의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관회의가 공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그만큼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본다는 의미로 읽힌다. 입장문에 담긴 문구도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표현됐다.

대법관회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난 폭력적인 무단 침

입과 기물 파손, 법원에 대한 협박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관회의는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법원과 법원 공무원이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정한 재판과 정의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 그 판단을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1면 '배배면적 조성'서 계속

정확철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 연맹 사무처장은 "일방적인 감축은 농민 소득 감소 등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쌀 수입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2월부터 농가를 대상으로 감축을 통보해야 하는 전남도의 우려도 적지 않다.

전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농식품부에 세 차례 공문을 보내 미참여 농가 폐닐터는 불합리하며 감축 면적에 대한 공익적 부담 추가 지급 등 농가 소득 보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발작물 재배시설 기반 구축 지원, 사료용 쌀 확대 재배로 곡물사료 원료 국산화 등 배배면적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시했다.

배배면적 전환을 위해서는 배수시설 필요하지만 시간이 촉박해 고령의 농민들이 불가피하게 휴경을 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민들은 사실상 인센티브 없이 페닐터만 부과되는 것으로 체감할 것"이라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감축 면적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